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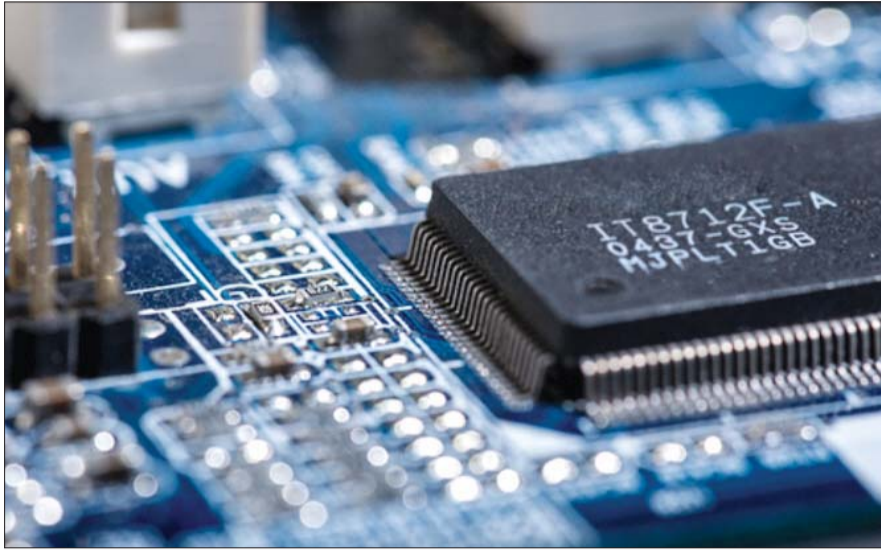
레거시 반도체, 中 집중 우려… “공급망 안정화 전략 필요”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美 제재로 中 첨단 반도체 접근 차단
향후 레거시 반도체 中 비중 1/3 예상
美, 자국 내 설비 확충… 보조금 지급
日, 국적·첨단·범용 여부 불문 지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도 이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근호(8월1일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말



/유투이미지

한다.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을 뒀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타격을

주자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전력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업계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국들도 자국내 레거시 반도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해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뿐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은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EU(유럽연합)은 ‘EU 반도체법’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텔과 TSMC 등은 독일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면서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조치가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거시 반도체 육성과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축수산물 물가 둔화… 안심하긴 일러”

농축산물 수급 상황검·대응방안 회의
농식품부, 장관 주재 재해대응 등 점검
생육관리·상생협의체 통해 지속 관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농축산물 물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농식품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 모두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수품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 주재로 지역별 재



는 계획이다.

해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차관 중심의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상황 및 폭염 등 재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무·배추 가용물량 2만8000톤(무 5000톤, 배추 2만3000톤)을 방출하고 있다. 물량이 부족할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추와 깻잎은 복구 및 재정성(모종 다시 심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쯤 공급량이 회복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수박은 8월 중하순께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복숭아·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폭염 및 태풍 등의 여름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폭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폭염 대응 요령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선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위한 상생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도입 조건이 완화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제도와 관련한 외식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식협회 등과 함께 사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음식점 사업주에 ‘外人 고용’ 교육

한식서 중식, 일식으로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영상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가 직접 교육동영상을 감수 및 제작해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각 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

허가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19일부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꼭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 기준 개정

항목 불일치 사항 조정·용어 명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

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우선,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크롬 산화물, 석면 추가)을 개정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

호산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의 경우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광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김대환 기자 kdh@

새롬어패럴,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

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 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동작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